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8.8)

1. 규제품목 수출허가 관련

□ [개별허가대상 규제품목의 수출허가]

- 8월 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의 對한국 수출 1건을 허가하였다고 발표함.
- 세코(世耕)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엄격한 심사¹⁾를 통해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점이 확인된 최초의 안전에 대해 수출 허가를 부여했다.” 고 발언함.²⁾

□ [일본 정부 입장]

- 경제산업성 장관은 “개별 수출건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금수조치라는 비판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발표했다.” 고 설명함.³⁾
- 또한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금수조치가 아니며,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관리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하면서 “계속 엄격한 심사를 실시, 우회 무역, 목적 외 사용 등이 없도록 대처해 나갈 것” 이라고 발언함.
- 다만 경제산업성 장관은 “7월 12일 실시한 설명회와 관련하여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공표하였기 때문에, 먼저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장급 협의는 실시하지 않을 것” 이라고 하면서 한국측의 행동을 촉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함.

1)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허가를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① 수출하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량 등을 기입한 신청서, ② 수출 대상 기업이 군사전용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 등의 서류를 받은 뒤 해당 기업에게 청취조사 등을 실시하여 수출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2) 「韓国への輸出管理厳格化後 初の輸出許可 経産省」 『NHK NEWS WEB』 (2019. 8. 8).

3) 「韓国向け輸出を許可、半導体材料、厳格管理後で初、経産相「審査踏まえ判断」」。 『日本経済新聞』 (2019. 8. 8).

2. 규제대상 품목 확대 검토 관련⁴⁾

□ [일본 정부 동향]

- 일본 정부는 향후에도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허가를 내는 한편,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새로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된 경우에는 개별허가신청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경제산업성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면 3품목 외에 규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취할 것” 이라고 발언함.⁵⁾
- 정부가 규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품목은 국제 합의에 근거, 정부령(政省令)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출시 사전에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리스트 규제상의 품목임.
- 7.4일자로 개별허가 규제대상 품목으로 분류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소재도 이 리스트에 포함됨.
- 한편 일반적인 제품 및 기술 중에도 가공하면 군사전용이 쉬운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닌 제품 및 기술로도 규제의 폭을 넓힐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함.
- 일본 정부는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주요국들과 협조하면서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리스트 규제의 품목 확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함.

4) 「韓国向け輸出 1件許可 半導体材料 厳格化後初、慎重審査 政府、輸出管理対象の拡大検討」 『産経新聞』 (2019. 8. 8).

5) 「政府：韓国向け輸出、一部許可 半導体材料3品目 厳格化後初」 『毎日新聞』 (2019. 8. 8). 및 각주 2와 동일 출처

3. 한일 관계 악화 관련 미국의 반응⁶⁾

□ [동향]

-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7일 “북한, 러시아, 중국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미일 3국이 결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주장함.
-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7월 동해 상공에서 공동으로 경계·감시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를 이용한 행위이며, 한미일 3국에 대한 도전으로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고 발언함.
- 한편 한일 양국은 관계를 개선할 책임이 있으며,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자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요구함.
- 그에 더해 내퍼 차관보는 “미국은 계속 이 문제에 관여하여, 양국의 대화를 촉구할 용의가 있다.” 고 하였음.

6) 「米國務省の高官 日韓両国に冷静な対応を呼びかけ」 『NHK NEWS WEB』(2019. 8. 8).